

# 복 지

## ≡ 차례 ≡

1. 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2. 노인 복지
3. 장애인 복지
4. 여성·아동·육아 복지

### 1. 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 □ 복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혹시 복지·문화영역의 지출이 경제성장 효과로서 국민소득으로 되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주지 않으면 복지 예산은 항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예산이 되고 복지를 말하는 정치인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이 됩니다. 성장 안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밤낮 성장에 관심 없는 대통령 후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에 대한 이론적 개발, 경제적 성장 효과로써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또는 긴 시간 이후 축적되는 어떤 파급 연관효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3차회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서 2003. 1. 22)

#### □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복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민주주의 발전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독재는 없어지고 특권과 권력의 횡포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생산성 없는 분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생산과 분배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별도의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론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아직 크게 뒤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예산을 정부 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 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과 사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차원에서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회복지사를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

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 수요자가 자기 정책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

그동안 요령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실적을 못낸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시간이 꽤 있습니다. 마무리 다 못하는 것은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기간에 수요자로서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요령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6월 항쟁 하면서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회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 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한 민주정부 수준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면서 사회가 감당해 내는 몫을 추동해 가는 것은 수요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 2. 노인 복지

### □ 노인들의 건강과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 호주머니 속에 용돈이 말라 있는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픈 것이 고민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야말로 참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용돈을 한 푼 더 드리고 심심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의료보험 지출이 너무 많아 국민 부담이 큽니다. 그중 20%가 노인요양에 쓰인다고 합니다. 쓸 돈은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노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출비용을 줄여 그 예산으로 또 다른 노인복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진행속도가 미흡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빨리 안 된다고 매를 강하게 때리지 마시고 살금살금 때려 주십시오. 잘하라고 하는 채찍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03. 10. 2)

### □ 노인들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

경제가 잘 되어야 하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복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입니다. 이제 노후가 되면서 점차 불안해져 있는데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느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노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야 미래를 믿고 기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국민이 됩니다. 노인들의 복지는 확실히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 지난 날 우리 한국의 경제기적을 일으킨 분들이십니다. 정치도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업적을 이룬 여

러분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해 나가도록 제도와 인식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노인대표 초청 신년 오찬에서 2005. 1. 26)

#### □ 고령화 사회정책은 일자리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만들어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도와드리며 자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이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인정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심하지 않게 취미 생활이나 운동 또는 경로당이 무료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가 어둡지 않도록 정보화에 돈을 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돌이켜 봐도 별로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부실한 것 같아 아쉽고 조마조마합니다.

(노인계 대표 오찬에서 2006. 1. 13)

#### □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늘릴 것

올해 8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 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참여정부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2만 5,000개이던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만 개로 늘었고, 노인복

지 예산도 출범 초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강·여가 프로그램, 노인수발보장제도, 요양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확실한 토대를 닦아 놓겠습니다.

(2007년 전국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2. 13)

## □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선진국이 될 것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되고 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데, 한국의 거리만큼 젊은이들이 활력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2007. 3. 6)

해외에 나가면 숲이 푸른 나라가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활력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품위 있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또 비교적 활력 있는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중에서 또는 우리 국민 전체의 총생산 중에서 복지 지출을 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정도, 또 유럽의 3분

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외로 나가면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20% 정도였습니다만, 올해에는 28%로 약 8%정도 비율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희망은 2030년, 2020년까지 미국,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2030년까지 대개 유럽 수준으로 따라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

### 3. 장애인 복지

#### □ 장애인정책에 속도를 더 내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입상 때까지의 땀과 노력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비해 초청이 늦어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해드리지 못해 안쓰럽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국민의 정부 기간 때 장애인정책이 많이 나오고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갈수록 발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큰 배와 큰 차는 처음 출발할 때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지만 예열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한국이 경제력이 세계 12위의 수준이 됐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밖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여건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 갖춰져야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 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도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정착돼야 성공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의무고용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풍부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형태를 다양화해야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어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경영 마인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문화와 함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정의 효율화 못지않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복지, 고용 등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 방문 간담회에서 2005. 6. 29)

##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다행히 최근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정부 부문에서 의무고용 비율 2%를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14년 만의 일입니다. 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의무비율을 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크게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고용효과가 큰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

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1.3% 수준인 고용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선물입니다.

(장애인고용 모범기업 격려서신에서 2006. 2. 6)

#### □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는 노력,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

장애인 정책에도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것이고, 국회에서 오신 두 분께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애로를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의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가집니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 □ 장애인정책 미흡했던 것 미안

2003년부터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이 2차로 들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꽤 버겁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가지고 간간이 강경한 투쟁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애와 소외된 계층에게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은 늘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장애인 영화 “맨발의 기봉이” 관람 후에 2006. 4.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좀 늦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렸다는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약속드린 것을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확실히 밀어 준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못 보냈습니다. 2003~2004년 지나는 동안 보건복지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들고 와서 해달라 하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대통령을 졸라대기 시작했던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약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의무고용 2% 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장애수당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2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사에서 2007. 4. 4)

## 4. 여성 · 아동 · 육아 복지

### □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하는 투자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투자입니다. 제 임기 동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국선 변론 등을 통해 경험한 바로는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좋은 육아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도 중요합니다.

예산은 제 임기 동안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육아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경제적 능력 등으로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육아지원정책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6. 11)

## □ 아이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 만들 것

올해에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것으로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보육문제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사교육비도 줄여 줘야 하고 입시 지옥이라는 지나치게 왜곡된 경쟁의 고통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집이나 일자리, 노후, 그리고 일생을 책임지는 건강의 보장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했습니다.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성, 보육 예산도 크게 내다보고 5년씩 짜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부처별로 나눠 주면 우선적으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멀리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정계획의 기초를 거의 잡아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올린 것을 연말에 읽어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본 미래재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간명하고도 알찬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

긴 어렵고 예산을 계획한 기획예산처에서 적절한 기회에 밝힐 것입니다.

2030년을 내다보는 계획 중에 여성들 몫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칙으로 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도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5만 달러로 가는 나라가 되고 보육은 90% 정부의 책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부가 관장해야 하는 몫이 큼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2006. 1. 10)

####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 저항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를 개방할 수 있으려면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저항보다는 유아교육 집단의 저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나 저항은 수요자의 의식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보육 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